



## 셀프 감사패와 25돈짜리 황금 문진 전임 박노황 경영진 ‘임직원 일동’ 명의로 제작

지난 3월 26일 저녁, 강남의 한 음식점. 박노황 전연합뉴스 대표이사, 이흥기 전무이사, 심수화 상무이사, 조복래 상무이사 등 네 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로 감사패와 순금 25돈(시가 522만 5천원) 짜리 동전모양의 문진(책장이나 종이쪽이 바람에 날리지 아니하도록 눌러두는 물건)을 나눠가졌다.

박노황 전 사장 몫의 감사패에는 재임기간을 2015년 3월 25일에서 2018년 2월 19일로 적었다. 감사패에는 “귀하는 제14대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의 수익 증대를 기하고 2019년 OANA 총회 유치 등 국가 기간뉴스통신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애진하셨기에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라고 적었다. 황당한 것은 감사패 수여자로 “주식회사 연합뉴스 임직원 일동”이라고 적어놓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조합원들이 연달아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100일 넘도록 박 사장 퇴진을 위한 텐트농성까지 했던 점을 기억하면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임원들의 감사패에도 재직시 직위만 다를 뿐 똑같은 문구를 넣었다. 이 문구는 이흥기 전 전무가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박노황 경영진은 전임 경영진과 신임 경영진이 이취임식을 겸할 수 있는 정기주총이 열리기 이틀 전에 자신들이 직접 만든 감사패와 기념품을 나눠 갖는 해괴한 행동에 대해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해괴한 행태는 최근 조정부 사장에게 감사패와 기념품 비용으로 지출한 2천

500만원에 대한 결재가 올라와 드러났다. 조 사장은 3일 퇴임시 감사패와 기념품을 받지 않을 예정이며 이 제도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만든 감사패와 기념품뿐만 아니라 박노황 경영진은 특히 돈에 민감했다. 지난 2017년 3월 주총에서 임원보수 한도를 9억원에서 13억원으로 증액했다. 연합뉴스TV는 8억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박노황 경영진은 보수를 올린 것이 아니라 보수한도를 올린 것이며 조직이 커져서 임원을 5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는 설명을 했다. 하지만 감사패에도 지난 3년의 공으로 “회사의 수익증대”만 적고 있어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이들은 미래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로서의 “신뢰”를 형편없이 망가뜨린 점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월 노조가 뉴스통신진흥회에 해임 청원

서를 제출해 해임 논의가 시작될 듯하자 도망치듯 회사를 떠났고 나머지 임원들은 ‘사장님 나가셨으니 남은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끝까지 버티며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감사패 전달은 지난 2006년 신임 김기서 사장이 전임 장영섭 경영진에게 감사패와 25돈짜리 문진을 이취임식때 전달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김 사장은 감사패에 “글로벌 멀티미디어 뉴스통신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셨고 12년 만에 영업흑자”를 실현했다고 감사의 이유를 적었다. 이후 박 정찬 사장이 김기서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신임 사장이 전임 경영진에게 관행으로 감사패와 기념품을 제작해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물러나는 경영진이 스스로 감사패와 기념품을 제작하고 동의없이 “임직원 일동”이라고 명의를 도용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이제 시작이다 국민신뢰 회복 시급...건강한 조직 되살려야

후안무치 박노황 경영진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끝까지 안면을 몰수한 채 우리의 소중한 일터에 해악을 끼치고 떠났다.

이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의 구성원들에게는 잃어버린 국민과 독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다.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공식 해산하면서 낸 성명에서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는 끝나지 않았다. 박노황 경영진만 사라진다고 해서 공정보도·민주경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노황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은 비

대위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 모든 사내 구성원들의 싸움이었다”며 “비대위 해산 이후의 싸움도 모든 조합원, 모든 사내 구성원들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사이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창립 30주년을 맞

